

#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 [평화운동 협력세션 I-2 :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 2.0을 위한 제안]

김건주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1일 개최된 2021 DMZ 포럼(DMZ Forum 2021)은 개회식과 특별세션, 기획세션을 지나 '한반도 평화체제 : 리셋 2.0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평화운동 협력세션을 진행했다. 이 세션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한 정육식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 : 비핵지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반도 문제 심화 원인이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 부재 때문이라 분석하고, 문제 해법의 '뉴 노멀(New normal)'로서 한반도 비핵지대 개념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안'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대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비핵지대 밖' 당사자들로 이 조약의 의정서를 체결하는 구도라 설명했다. 남북한의 핵무기 개발·생산·보유·실험·접수 금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 금지, 핵보유국들의 남북한 대상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핵무기 및 투발 수단 배치 금지를 법적 구속력 갖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 국가안보실 업무를 담당했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군비 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를 넘어 재래식 군비 통제의 주제를 다루어야 완성되며, 남북한 간 위협 인식 및 군사 능력의 비대칭성, 대량 살상무기 위협의 부각, 불안정한 역내 동북아 안보 질서 등 한반도 군비 통제만의 특징을 고려해 추진해가야 함을 설명했다. 따라서 첫째, 9.19 군사합의를 스톡홀름 협약 수준으로 발전시켜 운용적 군비 통제의 심화, 둘째,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잉 군사력의 축소, 셋째,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며 향후 도래할 남북 공동 안보 시대를 감안하는 거시 전략적 군축 조절을 남북 군비 통제의 추진 방향으로 제안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 : 무역-평화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무역과 평화의 관계를 분석한 선형연구들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양국 간 정치적 관계가 높으면 경제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효과는 남북 경험의 필요성 자체를 증명한다, 둘째, 대칭적 교역형태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화가 있어야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하므로, 교역 이익 크기의 절대적 확대, 개별경제주체 수준에서 관여수준 증대, 남북경협 관련 제도 전반 정비, 교역이익의 장기적 관점 증가 기대가 필요하다.

토론에서는 이종석 좌장이 발표자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미 간 비핵화 개념 정의의 차이로 문제되고 있다는 현 교착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지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육식

박사와 김정섭 위원이 답했다.

정욱식 대표는 비핵지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무기 및 그 투발 수단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의 제네바 협이나 9.19 공동성명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적 구속력과 다자간 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인 대북 안전보장방안에 대해 비핵지대가 현재보다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김중석 위원은 “비핵화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정의를 정교하게 합의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일 뿐 비핵지대라는 큰 틀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핵지대도 여전히 북한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는데, 북미 간 양자 합의가 어려울 때, 5개국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 보장은 복잡성만 증대시킬 뿐 실제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욱식 대표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기본적 정의는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 보장이고, 남북 모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추구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 비핵지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또한 “남북미 3자가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비핵지대에 대한 공감지대를 형성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평화체제가 달성될수록 북한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에 대비해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데, 운용적 측면의 군비 통제는 가능하지만, 군비 통제의 핵심은 결국 계속 치달아오르는 첨단무기 경쟁이므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정섭 위원이 답했다. 김정섭 위원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오히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은 보존하거나 더 강화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운용적 군비 통제와 더불어, 구조적 측면에서, 충분히 쌍방 억제가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적 군비 통제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법이고, 평화체제가 진전되면, 당연히 안보딜레마가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딜레마도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무역-평화 관계를 바라보는 나라들은 양국 간 일정한 소통이 되다 어느 지점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같은 생활공동체로 있다가 70년동안 단절 된 후 시작하는 남북 관계가 기존의 무역-평화 관계로 합리적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지영 위원이 답했다. 최지영 위원은 실증 분석 결과, 분쟁지역 경험한 국가들은 전쟁 직후나 직전에는 무역이 없다시피 하는데, 계약을 강제화하는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무역이 재개되면 그 관계가 경제적 협력에 기반해서 오래동안 평화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70년 단절되었다가 교역이 재개되는 남북한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지영 위원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함의(implication)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 [평화운동 협력세션 I-2 : 한반도평화체제 리셋 : 2.0을 위한 제안]

조찬신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1일 평화운동 협력세션의 두 번째 세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 2.0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 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며 북한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는 듯 보였으나 2019년 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의견 불일치 및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남북관계는 정체기를 맞았다. 이 세션에서는 기존의 선택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추동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았고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정육식 대표는 핵 협상 교착의 중요한 원인으로 서로 간 비핵화의 합의된 정의가 없었던 것을 들며 한쪽의 일방적인 핵 능력 억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지대 건설을 역설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핵의 위협 없는 환경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이러한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확고한 목적 없는 진행이 아닌 합의된, 고정된 목적을 합의한 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회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핵 이외에 전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대립하는 쌍방의 군비축소를 합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평양에서의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 중지와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에 군사도발의 위험이 종식되지 않았으며 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도 안보딜레마를 축소하기 위한 군축은 필수적이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군축을 통한 군사적 안정성을 예로 들며 실제 그들이 군사적 행동 이전에 상대국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사례, 공격용 우대무기에 대한 우선적 감축을 통한 기습공격의 가능성 축소를 낮춘 군사력으로 전쟁억지력을 높인 사례를 들어 이를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9.19 군사합의는 서로에 대한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소극적 협력에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반면 서로의 군사력의 질의 문제, 위협인식의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협력이 미진했다. 따라서 그는 핵 협상과 더불어 재래식 군사력의 쌍방향 통제를 이끌어 낼 합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최지영 연구위원은 자유주의 이론에서의 무역평화에 비춘 남북경협과 북한 전략변화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무역과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가 갈리기에 일률적인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심화할 시 경제적 관계가 이에 비례한다는 전제, 경제적 능력이 대칭적이며 무역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했을 때 남북경협은 그 자체로 쌍방의 정치,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평화체제의 확립과 무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교역의 참여자

들이 서로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의 전향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오랜 대북제재로 인해 최근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역평화이론에 근거한 남북경협의 재개가 요구된다.